

이종태 시의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비 세입편성한 법적근거 있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3일 열린 제3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징수한 2025년도 식재료관리비(매출의 1.5~3.0% 부과) 55억여 원을

서울시 세입예산 중 기타사업비로 편성했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타당한가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서울시농산물공사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공급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면서 그 유통과정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여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였다.

첫째,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인데, 동법에 의하더라도 시설사용료는 0.5% 이내로 제한하여 가격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식재료 관리비는 매출액의 1.5% 내지 3.0%를 징수함으로써 농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는 도매시장인 서울농수산물공사임에도 서울시는 해당 금액을 기타사업비 항목으로 매년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뿐인데, 서울시가 학교급식유통사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여 기타사업비로 편성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도매시장 중도매인을 통하여 시장사용료를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중복적으로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에 나선 서울시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은 “식재료관리비의 징수 근거는 서울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라며, “지적해 준 문제들과 관련하여 징수요율을 낮추는 방안 또는 징수된 금액을 학교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뒤바뀌었다”… 청년·여성·가족 핵심 정책 축소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

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자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핵심 정책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연금이 0원으로 삭감된 것은 재단의 정책 연구와 도민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173명 구성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이 빠듯할수록 정책 우선순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청년·여성·가족 분야 핵심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가 예결위 단계에서 책임 있는 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임창휘 의원, “AI 인프라는 미래 성장의 고속도로...경기 전역을 하나의 AI 벨트로 만들어야 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GPU 등)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목) 열린 AI 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

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 깔아줘야”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개발 이익, 꾀장 빼먹듯 쓰지 말고 ‘AI 특별회계’로 묶어야”

특히, 임창휘 의원은 막대한 재원의 해법으로 ‘(가칭)경기 AI·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해 용지 매각 수익을 재투자하며 성장했듯, 향후 조성될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의 10~2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자는 것이다.

임창휘 의원은 “적립된 재원의 용도를 AI 스타트업 지원, GPU 센터 구축, R&D 자금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만드는 GH, 산업 채우는 AI국… ‘G-Tech 원팀’으로 묶어야”

또한, 도시 계획과 산업 육성이 따로 노는 행정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경기 테크노 원팀(G-Tech One Team)’ 구성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과 경기주

택도시공사가 도시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나면 뒤늦게 AI국이 AI산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방식은 늦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하여, 자율주행 도시에 도로 센서와 통신망(V2X)을 미리 심는 식의 ‘AI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경기 전역을 ‘AI 벨트’로… 규제 많은 동부권은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역발상

한편,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 남부권에는 반도체·바이오 중심의 AI 클러스터, ▲경기 서부권에는 모빌리티 AI 클러스터, ▲경기 북부권에는 산업 AI 클러스터, 그리고 ▲경기 동부권에는 데이터 AI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 전역을 하나의 ‘AI 벨트’로 묶어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12월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고양특례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해 2026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2월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하였다.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

임(대표의원 안신일)’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영)’은 청소년 관련 조례와 정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세종시 BRT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할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며,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됐다는 평가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의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임에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송민수 기자

힐링가득한 덕적도 여행!

덕적도 자연휴양림

예약방법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니들'에서 예약

문의

숲니들 통합고객센터 : ☎ 1588-3250

덕적도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 ☎ 032-899-2860

9

송진을 새롭게
국민을 신나게

자연휴양림